장비·인력 총동원 제설…땅·바다·하늘길 안전확보 총력

광주시·전남도, 역대급 폭설·한파 재난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대책반·상황실 긴급 가동…코로나 지친 공무원들 안전도 만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파와 강풍을 동반한 역대급 폭설피해를 막기 위해 '대설·한파 긴급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폭설로 통제된 도로와 바닷길, 하늘길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설작업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도는 또 코로나19 장기 방역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공무원들이 폭설피해 복구작업 등을 하다 불상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내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오는 9일까지 많게는 30㎝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비 비상 근무체제를 구성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기상 상황을 공유하고 제설 등 대책을 논의한 뒤 합동으로 대설·한파 긴급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자치구 부구청장, 본청 시민안전실장, 종합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에 한파와 폭설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져 마음이 무겁다"며 "대책반과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시민 불편 접수창구를 '시·구 공동 대설·한파 긴급 대책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다음 달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긴급 전화를 운용한다.

시는 시민들이 제설, 장비대여, 피해복구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시·구 공동 대설·한파 긴급 대책반'으로 요청하면 곧바로 조치하기로 했다.

대책반 대표 전화번호는 ▲광주시 062-613-2119 ▲동구 608-2845 ▲서구 360-7471 ▲남구 607-2941~3 ▲북구 410-6490 ▲광산구 960-6896 등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출근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제설 작업 등에 투입됐다.

시는 이날 하루에만 제설 차량 40대, 염화칼슘 등 1005t을 활용해 269개 노선, 686㎞ 구간에서 제설작업을 했다. 또 입산이 통제된 무등산 구간 등 진입이 어려운 시내버스 33개 노선은 단축 또는 우회하도록 했다.

전남도도 이날 대설·한파에 따른 대처 사항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제설 작업과 함께 농작물·양식어류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의 대설 한파 대응책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빙판길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장비도 임대해 신속한 제설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비닐하우스 눈 치우기 등 인력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군부대 등과 협의한 후 신속히 지원하고, 마을공동체와 자율방재단 등 도민의 협조가 필요한 내 집 앞 눈 치우기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는 폭설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안전 점검과 함께 양식어류 월동장 이동 및 어선 입출항 통제 결박 대피 조치도 마무리 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도내 55개 모든 항로가 통제되고 있고, 도로는 구례 성삼재·진도 두목재·대명리조트 진입로 등도 이용을 금지했다.

방파제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제설 중점구간은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제설작업에는 인력 1264명·장비 573대를 투입해 총연장 8544㎞ 구간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재난 취약계층 대상 1일 1회 안부 확인과 24시간 응급진료 비상 체계 구축, 재난문자·마을방송을 통한 대설 한파 예방 도민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기상청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근무 단계 상향조정 등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설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에 대설·한파·강풍주의보가 내려진 7일. 광주공항 계류장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광주공항은 이날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로 선출

경선룰 확정…여성 10%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등 4월 재·보궐선거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재보선 기획단은 7일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경선룰을 정했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경선룰을 최종 확정한다.

강 대변인은 "권리당원 50%, 일반선거인단 50%의 큰 틀을 유지한다"며 "신인 참여나 흥행을 위한 세칙은 각 시의 선거기획단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에서는 1차, 2차로 경선을 나눠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1차에서 일정 숫자의 권리당원과 주민이 투표해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한 뒤 시간을 조금 두고 2차 경선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결선투표 여부에 대해선 "1위 후보가 50%를 안 넘기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후보군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시장 제3후보론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경선 일정으로는 "서울은 설 전에 경선 일정을 시작해 설 이후인 2월 말 정도 후보가 정해질 것 같고, 부산은 좀 더 늦어져서 3월 정도에 후보가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신인에게 적용되던 가점 조항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적용받는다. 그렇지 않은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 조항을 적용받고, 기타 정치신인은 '최대 20% 가산'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성 중진 정치인에게 가점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10% 가산'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율 35.1%…또 최저치 경신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의힘 32.5%·민주 28.6%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또 넘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35.1%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61.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주중집계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부정평가 최고치는 연휴인 지난 1~2일 YTN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서 기록한 61.7%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면서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지지도 추이를 반전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2.5%로 2.1%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1%포인트 내린 28.6%였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0.3%, 민주당이 27.2%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38.6%를 기록, 21.6%에 그친 민주당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선, 이재명 24%·윤석열 16%·이낙연 15%

4개기관 합동조사

민주 지지층 73% 사면론 반대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4%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로 뒤를 이었다.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3%포인트, 윤 총장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대표는 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윤 총장의 순위가 바뀌었고,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내였던 1, 2위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윤 총장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된 11월 3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0%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로, 지난 7월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41%)를 기록했던 2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1%로, 2%포인트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3%로 2주 전보다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 '공감한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3%로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